열린 충남

Vol. 109
2025
SUMMER

권두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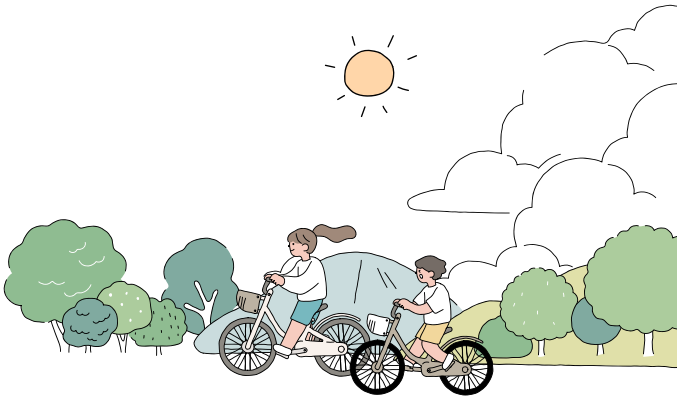
특 집
행정통합, 경쟁을 넘어 경쟁력 갖출 최적의 기반
충남의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관건
베이밸리 메가시티=국가 균형발전 + 글로벌 경쟁력
충남의 미래, 농업·농촌이 살아야 한다

서른 해, 충남을 담다
충남의 도시 발전과 미래
농촌다움에 대한 불편한 고민들
충남의 보배, 섬을 섬겨야 한다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 『열린충남』 2025년 통권 109호
국제연속표준간행물[ISSN] 1226-637X 비매품



Contents

2025 SUMMER Vol. 109

권두언

04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길**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

특집

05 **행정통합, 경쟁을 넘어 경쟁력 갖출 최적의 기반**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고승희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남의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관건
유재룡 충청남도 정책수석보좌관
이홍택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베이밸리 메가시티=국가 균형발전 + 글로벌 경쟁력
소명수 충청남도 균형발전국장
홍원표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충남의 미래, 농업·농촌이 살아야 한다
이정삼 충청남도 농축산국장
유학열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서른 살이 서른 살에게 Ⅰ

24 **"열린충남" 창간 30년, 충남미래의 희망 소식誌**
이인배 금산군 정책기획보좌관

서른 해, 충남을 담다

26 **충남의 도시 발전과 미래**
박철희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농촌다움에 대한 불편한 고민들
정봉희 충남연구원 출판홍보팀장(feat. 조영재 박사)

충남의 보배, 섬을 섬겨야 한다
이재언 광운대학교 해양섬정보연구소 연구원

서른 살이 서른 살에게 Ⅱ

40 **'충남 지역연구의 메카'로 자리잡길 응원합니다.**
양재섭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도시정책연구소 도연재 대표

언론이 바라본 충남

42 **충남연구원 30주년, 도전과 성과 그리고 미래**
김방현 중앙일보 대전총국장

로컬이 답이다

46 **고기의 가치를 생각하는 수의사, "샤르베티에"**
유승현 샤르베티에 대표

서른 살이 서른 살에게 Ⅲ

50 **95년생 동갑의 편지**
이지영, 고성훈, 신주희

연구원소식

51 **충남 청년정책 공동연구 활성화 맞손**
충남연구원, 인구감소시대 도시계획 과제와 대응 방안 모색
충남도,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한 VOCs 관리 방안 모색

열린충남

2025 **SUMMER Vol. 109**

04 권두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길



05 특집
행정통합, 경쟁을 넘어 경쟁력 갖출 최적의 기반
충남의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관건
베이밸리 메가시티=국가 균형발전 + 글로벌 경쟁력
충남의 미래, 농업·농촌이 살아야 한다



26 서른 해, 충남을 담다
충남의 도시 발전과 미래
농촌다움에 대한 불편한 고민들
충남의 보배, 섬을 섬겨야 한다



42 언론이 바라본 충남
충남연구원 30주년, 도전과 성과 그리고 미래





46 로컬이 답이다
고기의 가치를 생각하는 수의사, "샤르베티에"

51 연구원소식
충남 청년정책 공동연구 활성화 맞손
충남연구원, 인구감소시대 도시계획 과제와 대응 방안 모색
충남도,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한 VOCs 관리 방안 모색

발행일 2025년 6월 **발행인** 전희경 **발행처** 충남연구원 **편집위원장** 오용준
편집위원 백운성, 김양중, 김영일, 오혜정, 유학열, 이홍택, 김진수 **에디터** 정봉희, 안드리
주소 우)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전화** 041.840.1114
팩스 041.840.1129 **홈페이지** www.cni.re.

스마트폰으로도
[열린충남]을
만나보세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길



충청남도 도지사
김태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연구원 가족 여러분

올해는 충남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30년간 충남연구원은 우리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싱크탱크로서 지역 발전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희경 원장과 모든 임직원, 그리고 그동안 연구원을 이끌었던 역대 원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민선 8기 충남도정은 '힘쎈충남'답게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과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취임 당시 8조 3천억 원에서 매년 1조 이상씩 증액시켜 올해 예산은 10조 9,26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총 33조 4,800억 원에 달하는 기업투자를 유치해 냈고, 천안·홍성 국가산단과 금산 양수발전소 유치, 아산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통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 등 정부의 굵직한 공모사업을 유치해 내며,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혁신해 청년이 모이고 돈이 되는 농업을 실현하고자 스마트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단지,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등 미래 농업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산업구조 전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탄소중립 R&D 기관 유치 등 기후위기 대응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미래 모빌리티와 바이오, AI·양자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해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충남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정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연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연구원 설립 취지에 맞는 책임감 있는 자세와 현장 중심의 연구, 그리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가올 30년, 충남연구원은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정신으로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며, 도정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농업·농촌의 혁신, 국가 탄소중립경제 실현,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 저출생 등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연구원이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도약해 충남의 미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전략을 마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동반자가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행정과 산업, 교육과 문화, 환경과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연구원의 전문성과 혁신이 도정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충남연구원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연구원이 충남 발전의 중심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길 기원합니다.

특집

행정통합, 경쟁을 넘어 경쟁력 갖출 최적의 기반
충남의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관건
베이밸리 메가시티 = 국가 균형발전 + 글로벌 경쟁력
충남의 미래, 농업·농촌이 살아야 한다

특집 01

행정통합, 경쟁을 넘어 경쟁력 갖출 최적의 기반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고승희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주요 목적과 기대되는 효과는?

강성기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맞춤형 특례 보장을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 보면 됩니다.

현행 17개 시 · 도 광역행정 체제로는 수도권 집중 심화 및 지방소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9개, 충남 15개 시 · 군 중 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국세 이양·지방세율 조정 등을 통해 자치재정권 확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유역환경청 등 특별행정기관 이관,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총 255개의 특례 통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여, 지역주도 성장 모델을 정립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전 · 충남 행정통합의 가장 큰 이익은 광역도시계획 · 추가세수 확보 · 중앙에서 이양받는 권한 · 특례에 기인한 특별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거죠. 기관 · 기능 통폐합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을 도로 · 철도 건설, 문화예술, 보건복지 등 주민 접점 서비스에 재배치하여 행정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남 15개 시·군과 대전 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의료기관 연계, 교통인프라 구축 등)하여 주민 편의 증진 및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승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통합은 크게 인구 및 경제구조의 변화, 교통과 통신의 발달, 지방의 격차 심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총인구의 감소는 대전과 충남에서도 나타날 전망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도권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2019년 이

후 총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생산요소보다 전문성을 지닌 인적자원과 데이터 등이 중요한 생산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산업구조의 전환은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집중시켜 2022년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는 수도권이 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2.8%, 충남은 4.3%에 불과한 수준으로 경제력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현 행정체제는 과거 인구증가와 성장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만큼 인구감소와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통해 자생력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형성하여 생활과 행정서비스의 연계를 높이고자 합니다.

2. 충남과 대전 간의 행정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가 있을텐데, 지역민에 미칠 영향은?

고승희 한 마디로 충남과 대전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상호보완하는 정책적 연계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광역행정 중심의 대전이 가진 역량과 기능을 충남으로 연계시켜 광역생활권 중심의 구조를 지닐 수 있으며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제조기반 산업인프라를 결합시켜 과학과 인프라가 함께 이루어지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인프라 공동사용과 60분 생활권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정착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청내륙철도, 보령-대전 고속도로, 서선공항 등 집중 재원을 투입할 수 있으며, 충남의 산업인프라와 대전의 과학기술이 합쳐지고, 국내외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컬 시대의 대학을 뒷받침하게 된다면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세계와 경쟁가능한 자립도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성기 1989년을 기점으로, 고성장을 기반으로 한 분권의 흐름 속 충남과 대전은 35년간 분리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통합이 완성되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충남도는 도와 시군 간 2단계 행정체계로 조정·조율이 필수적, 대전은 시에서 구로 이어지는 단일체제로 행정 체계가 다릅니다. 문화 또한 충남도는 농촌 기반의 공동체 문화와 대도시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반해, 대전은 도시형·과학문화 중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과 대전은 본래 한뿌리였으며,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성이 공존하는 행정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 차원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여 정책 시너지를 창출하고, 각각의 지역 정체성을 존

중하면서 대전의 과학 콘텐츠와 충남의 생태·전통 자원을 연계하여 체험형 관광·교육 사업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 신산업 연구개발과 생산기반을 연계하여 기능 분업 기반의 혁신 산업 벨트를 구축하여 양 지역 간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3. 무엇보다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강성기 맞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1차 소통분과위원회 회의('25. 2. 25.)에서 프랑스(레지옹), 일본(오사카부), 대구 · 경북 등 국내 · 외 사례 검토로 공론화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의회 특별위원회와 협력하여 법률안 검토, 시 ·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방안 수립 · 시행 등 통합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계속 추진 중입니다.

대전 · 충남 행정통합의 관건은 마련한 비전 · 법률안 등을 토대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 · 도민으로부터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특히 6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충남·대전 지역민들 대상 설명회를 시작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의 실질적 이점을 중심으로 사례를 발굴 중입니다.

4.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진행되고 있나요? 법적 장애물이나 예상되는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승희 강 실장님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소통과 인식 전환을 위한 비전(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및 목표(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국가전략 산업 진흥, 시민행복 증진)를 설정하고 법률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초안을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 자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소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하게 됩니다. 이후 법률안 제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소 조정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이 예상됩니다.

충남과 대전이 보다 발전적인 미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시되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사항 등이 이번 법률에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들이 요구됩니다.

5. 통합 후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강성기 대전·충남 통합은 조직·인사·재무 분야의 자치권 강화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자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일환입니다. 우선 국세(양도소득세 · 법인세 · 부가세) 이양 및 지방소비세 요율 조정, 통합 교부금 지원 등 각종 재정지원으로 연간 8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는 물론, 양 시·도의 경직성 경비(충남 1조2,146억+대전 7,259억) 중 10%만 절감하더라도 연간 1,940억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조직 통폐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경제산업 · 농업해양 · 도시개발 · 교육문화 등 지역의 현안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농업육성지구, 고령농 은퇴연금제 등 농촌구조개혁 추진, 유인도서 개발과 같은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정의로운 전환 특구, 탄소중립 선도도시 등 친환경 탄소중립기반 조성, 연구개발특구 및 실증을 위한 규제 완화 등 과학혁신거점, 첨단과학기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베이밸리 제도화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습니다.

6. 올해는 연구원 개원 30주년이자 민선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이번 행정통합 연구 등을 계기로 연구원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강성기 지난 30년간 충남연구원은 지역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산업 전략, 내포신도시 개발 전략 등 도내 현실과 특장점 분석을 토대로 한 실현 중심의 정책을 제안하는 등 충남도 대표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향후 통합 이후의 특별시 청사진을 수립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지원하여, 계속 그래왔듯이 충남도청과 공동으로 실무·협업을 더욱 강화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내외 통합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한 통합 시나리오, 주민 인식조사 등 민감한 통합 쟁점의 선제적 분석 통한 공론화 모델, 실현가능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앞으로 협력할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책 브레인들이 집결되어 있는 충남연구원이 50, 100주년을 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 거점급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특집 02

충남의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관건



유재룡
충청남도 정책수석보좌관



이홍택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 민선 8기 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언했다. 그 배경은?

유재룡 아시다시피 전국의 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화학단지, 제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이 위치하여 전국 1위의 탄소 배출 지역이기도 합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는 보령과 서천에서 3차례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태흠 지사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습니다.
탄소배출 1위의 불명예를 산업으로 이겨내는 방안으로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구상하여 공약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홍택 그렇습니다. 충남도는 온실가스 배출이 전국 1위(22.1%)인 지역으로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세 등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과 고탄소 배출 산업(디스플레이, 제철 등)이 집중되어 있는 충남도가 탄소중립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역경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탄소중립을 둘러싼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선도적인 경제체제로의 재편을 목적으로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하였습니다.

2. 충남의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분야는? 특히 우선순위 정책이 있다면?

이홍택 충남도의 온실가스는 62%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제철 등 산업부문에서도 30% 이상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56.1%는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송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화가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대응한 친환경 에너지원의 다각적 보급을 비롯해, 디스플레이, 제철, 석유화학 등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화를 위한 R&D, 고효율 시설・장비 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유재룡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현 방안은 바로 '에너지 전환'입니다. 석탄발전 중심의 전력 생산을 친환경, 수소 등 대체 발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산업전환입니다. 탄소 다 배출 산업을 저배출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기술 개발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의 수요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컨대 수소를 활용한 발전기술, 수소 터빈, 합금을 통한 롤로의 수명 연장 등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인식개선입니다.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루고 이러한 마음을 모아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3.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남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사례는?

유재룡 세계 주요국가는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 감축을 위한 2035 NDC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초안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3년 정부 일회용품 정책 변경에 따라 충남도 내 종이빨대 생산업체 5개 중 4개가 생산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의 위상에 맞는 실천형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흠 도지사께서 언더투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의장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탄소중립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로 도와 시군, 기업, 종교계 등 102개 단체가 동참하였습니다.
충남도청의 경우 2022년 대비 약 60%의 플라스틱 발생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를 도내 어디에서든지 20분 내 이용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소자동차 18,000대 보급을 위해 수소충전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 충남의 탄소중립 정책이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타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나 전략은?

이홍택 충남의 탄소중립 정책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산업구조 개선' 뿐만 아니라, 생활 속 실천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을 중심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일회용품 제로 충남' 선포, 도민이 참여하는 탄소상쇄숲 조성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의 경우 탈석탄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구조전환기금 400억 유로(약 54조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조성, 수소 등 신산업 육성, 공공기관 설립 및 일자리 창출, 지역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일은 탈석탄 지역의 경제 체질을 바꿔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5. 무엇보다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유재룡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예컨대 국내 유일의 태양광 핵심소재 업체였던 웅진에너지가 2022년 파산하였습니다.

이는 태양광 수요가 늘고 있는데, 보급에만 치중해 중국의 저가 제품 시장 잠식으로 산업주도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둘째, 나부터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도청 주변에 오피스텔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보면 모든 탑승장에 상하 버튼이 눌러져 있습니다.

매층 되풀이되어 부지불식간 에너지 과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신기술 개발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사업까지 저탄소 산업 육성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6.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투자 확보 방안은? 특히, 기업 및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홍택 충남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탄소중립 실현이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유기적 협력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기금 조성을 통해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의 자원과 역량을 고려했을 때 탄소중립 테스트 베드로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관련 부처별 지원정책의 적극적 투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 시민사회 등 민간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충남형 기후행동 '그린동행'을 통해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과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7. 충남도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 앞으로의 선택과 집중은?

유재룡 앞서 얘기했던 '에너지 전환'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온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성과에 더해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금산 양수발전소 유치, 세계 최초 수소전소 62%, 수소전소 100% 성공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확보를 위한 풍력발전, 경관 및 환경과 동화하는 태양광 발전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전환과 신기술 개발입니다. 도내 작은 기업에서 합금에 성공한 제철소의 롤은 사용기한을 6배 늘리는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이밖에도 탄소를 포집하여 황화작용을 통한 건축자재 개발, 폐자원을 활용한 항공유 개발 등, '탄소중립경제'에 걸 맞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중심의 충남을 이룰 것입니다.

이홍택 우선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역침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발전거리에 따른 전기 차등요금제 등을 고려했을 때, 친환경 에너지원의 충남도

유치를 비롯해, 탄소중립 등 공공기관의 충남도 이전을 위한 역량 결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바,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저탄소화, 탄소중립 생활 속 실천 등 각 영역별로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콜렉티브 임팩트 창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8. 올해로 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탄소중립 관련 연구 등을 계기로 연구원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유재룡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의 씽크탱크입니다. '탄소중립 경제'는 충청남도의 제1의 지향점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이 '빨리 가려면 뛰어가고, 멀리 가려면 어깨동무하고 가라'처럼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연구원은 이홍택 박사를 중심으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천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다만 관련 연구를 전담하거나 협업하는 구조가 보다 체계화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 및 시군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충남도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한발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집 03

베이밸리 메가시티 = 국가 균형발전 + 글로벌 경쟁력



소명수
충청남도 균형발전국장



홍원표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1.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상의 시작과 의미는?

소명수 베이밸리는 충남도의 민선 8기 1호 결재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요. 2022년 9월 김동연 경기지사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아산만순환철도 건설 등 13개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경기도와 베이밸리 기본계획 수립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기본계획과 청사진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베이밸리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여러 기능들을 분산시키고 아산만 일대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해 최첨단 산업이 밀집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발전을 넘어 국가경제성장, 균형발전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홍원표 그렇습니다. 베이밸리 권역은 경기도 평택, 화성, 안성, 안산, 시흥 등 5개 시군과 충청남도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예산 등 5개 시군이 속한 지역입니다. 이 권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등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3.1%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생산집적지이자 미래 주력산업의 최대집적지입니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미·중 신냉전 등 중대한 대전환의 시대속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재도약을 준비하자는 전략이 바로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취지입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은 충남과 경기도의 행정 관할이 걸쳐 있는 지역으로 강력한 협력체계가 없으면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충남과 경기도의 협력은 성공적 프로젝트 추진의 필수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2.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경제적 측면에서 미치는 주요 효과는 무엇인가요?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우리나라 산업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성장거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조현장혁신을 중심으로 산업, 인재, 정주, 인프라 등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제를 선도하는 권역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2050년경에는 세계 GDP 20위권 도약, 외자유치 3년 평균 22억 달러, 50분 생활권, 청년층 정주의향 65%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성공은 우리나라 산업경제 발전축을 현재 서울 인근 경기도 지역에서 충남 북부로 남하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서울 인근 경기 지역에 신규투자가 편중되는 상황을 해소하는 의의도 있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통해 천안, 아산뿐 아니라 당진항의 수소에너지 공급 거점, 서산공항의 중부권 항공물류 허브, 예산의 바이오 클러스터 등의 정책이 자리잡으면 다른 시·군의 발전까지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핵심 인프라와 교통망 구축 계획? 지역 간 경제적 연결성 강화 방안은?

소명수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조기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 간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지난해 대정부 역제안을 통해 '아산만 순환철도'가 11년 앞당겨 개통한 저력을 바탕으로 각종 국가 대동맥 연결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31년 개통되면 홍성역에서 용산역까지 45분만에 이동이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통팔달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기 완성으로 대한민국 50년, 100년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4.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주요 실천 과제와 정책은 무엇인지?

홍원표 베이밸리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경제산업수도 베이밸리"라는 비전을 갖고 "신성장동력 창출", "글로벌 네트워크의 가교 역할 수행", "메가리전의 중심지 육성"이라는 3대 목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10대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체계를 기초로 내용적으로 산업, 인재, 정주,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20대 핵심과제와 5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50년을 계획연도로 설정한 장기 프로젝트이므로 단계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실현해야 할 사업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민선 8기에는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여 반도체·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개발혁신생태계 구축,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핵심과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과 충남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명수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 지역내총생산(GRDP)도 수도권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등 수도권 과밀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남도는 지역 특색·특장을 반영한 5대 권역별 발전 전략을 마련,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외에도 충남혁신도시 완성,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 문화관광명품도시 조성 등 지역 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도 전체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8년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제2단계 제1기*('21.~'25.)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실 추진과 함께(9개 시·군, 7,107억원) 제2단계 제2기('26.~'30.) 사업을 확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색·특장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국가공모 사업 등을 연계 추진하는 등 도내 지역 간 격차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6. 메가시티 구상 실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홍원표 이번 프로젝트에 약 37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정부 재정, 지방 재정뿐 아니라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민간자본 유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첫째는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국가사업화 등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특구제도의 활용 등 제도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기구(가령 충남경제자유구역청 등)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7. 올해로 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베이밸리 메가시티 연구를 계기로 연구원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소명수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은 충남연구원은 그동안 도정의 든든한 싱크탱크로서, 현장 중심의 정책 연구와 실효성 높은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연구역량과 경험은 충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데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핵심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응하고, 시대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이끌어 온 연구원의 헌신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 기후 위기, 저출생·고령화 등 복합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때, 충남연구원이 지역 정책연구의 모범이 되는 미래지향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충남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도민의 더 나은 삶과 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특집
04

충남의 미래, 농업·농촌이 살아야 한다



이정삼
충청남도 농축산국장



유학열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1. 충남 농업·농촌의 현황과 주요 문제점 (과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정삼 충청남도는 전국 쌀의 약 19.7%('24년 기준)를 생산하고 있으며, 돼지사육두수 전국 1위(20.6%, '24년 기준)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업 및 축산업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농업 ·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가소득 감소와 경영악화, 유통구조의 비효율성, 청년농업인 부족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학열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지역 농업 · 농촌 현장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사람(인구)"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산업의 근간인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진행속도가 빠릅니다. 이처럼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양적 문제도 심각하지만, 저는 인구의 질적 문제에 정책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농촌산업의 근간을 지탱하는 농가인구의 감소, 농촌사회의 활력을 담보하는 청년층 인구 감소, 더불어 농촌지역과의 교류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강마야 다른 한편으론, 충남 농업·농촌의 당면한 문제는 저출생 및 초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위기, 기후위기, 도농간 불균형과 소득양극화 위기 등도 중요하게 다뤄봐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농업 측

면에서 보자면, 저출생 및 초고령화로 인하여 고령농업인 증가 속도에 비해 청년농업인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사실입니다. 70세 이상 농업인은 전국 76만 명 중 충남은 9.8만 명으로 41.4%를 차지하고, 45세 미만 농업인은 전국 30.1만 명 중 충남은 2.9만 명으로 12.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과 함께 짓는다는 기존 농사경험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일상화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존 농업보조사업 관련 연구결과가 따라잡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중첩된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서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죠.

2.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업 및 농촌 정책이 있다면?

강마야 현재 충남의 농업정책은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마련,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등의 역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농업인 대상의 ICT 시설원예 스마트팜 확산, 기존 축산농장을 집적화시키는 ICT 스마트 융복합 축산단지 확대, 고령은퇴농업인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는 직불금 확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재배기술 고도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 기술개발(R&D) 등 아주 다양합니다.

유학열 특히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인구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농촌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유입 정책(귀농 · 귀촌, 창업 · 창농 등) 및 인구유출 억제 정책(출산, 보육, 교육지원 등) 등 다양한 시도를 해 왔습니다만, 뚜렷한 효과 없이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충남도에서는 스마트 청년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및 제2차 베이비붐 세대 중심의 귀농 · 귀촌인 유입 정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도 보이고 있어서 고무적입니다.

3.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화 기술이나 스마트 농업의 적용 방안은?

강마야 충남은 스마트팜 확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세부 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지원, 직업전환교육기관 지정운

영,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시군별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등이 있습니다. 그 외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고령농과 대규모 전업농 특성에 따른 맞춤형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과 도단위 중간조직 운영 및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교통, 주거 등 기본적인 복지 인프라의 개선과 관련된 정책(계획)은 무엇인지요?

유학열 그동안 충남도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특히 농어촌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사업 및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교통여건 확충 및 개선을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추진, 농어촌지역 공공형 택시 확충,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 인프라 개선을 위해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 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및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 충남 농촌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협력 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정삼 농촌 일자리 창출과 농업의 산업화 및 스마트팜, 수직농장, 바이오 농업 등의 전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창업 허브를 설립하고, 기업과 정부가 함께 가공 · 물류 · 체험 · 유통을 포괄하는 농업의 산업생태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에 지역 농업 특화연구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과 각종 세제혜택, 보조금, 융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고, 창농지원, 주거지원, 교육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청년 유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 공급은 물론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보급과 사육부터 육가공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고, 가축분뇨에너지화가 이뤄지는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수소 등을 활용한 열병합 발전, 마이크로드리드 사업 확산으로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 저감 등 다양한 시도가 요구됩니다.

6. 농촌에서의 저출생 문제 해결 및 농촌 활력(매력)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 정책이 있다면?

유학열 침체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사람"과 "조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키우고, 더 나아가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청년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경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주민, 개별 조직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기에 농촌지역 읍면 단위의 "지역운영조직(RMO)"이 필요합니다. '지역운영조직"은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외부 주체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농촌지역의 공동체 회복, 농촌경제의 다각화 및 농촌자원의 보전관리 등 농촌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부족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관계인구)의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전략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충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강마야 마찬가지로 다중복합 위기 해결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농촌지역에 사람을 남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향후 충남의 농정은 농촌지역사회 유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스마트팜에서 마을 단위 공동으로 이용하는 노지스마트농업으로 확장, 고비용·고투입 농업방식에서 저비용·저투입 농업방식으로 전환, 청년농업인 중심에서 청년농업인과 마을 기성세대 농민 간 협력적 농업생산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마을단위 공동영농 활성화, 마을단위 농지와 사람을 연결하는 오프라인 플랫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민 주도의 저탄소 농사방식 활성화, 포괄적인 농업재해보상제도 도

입, 유기성 폐자원(농산물 부산물 등)을 활용한 마을단위 재생에너지 인프라, △도농 간 불균형과 소득양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마을 내 유휴시설 리모델링과 기초생활서비스 인프라, 농산물 생산비(원가)에 기반한 충남형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8. 올해가 연구원 개원 30주년이다. 농업·농촌 연구 등을 비롯해 연구원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이정삼 그동안 충남연구원에서는 충남의 다양한 농업·농촌정책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농업 실정을 반영한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왔습니다.

무엇보다 민선 8기에는 스마트팜 확산과 농업인 기준 강화 등 농업·농촌 구조개혁을 선도하는데 든든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농촌 고령화, 소득 정체, 성장 동력의 약화 등 모든 구조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데 연구원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함께 관심을 갖고 협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른 살이 서른 살에게

“열린충남” 창간 30년, 충남미래의 희망 소식誌

이인배 금산군 정책기획보좌관

충남연구원의 퇴직에 앞서 정보자료실에 열린충남 창간호부터 그 이후 30여년 가까이 발간된 전체를 기증하였다.

왜냐하면 ‘열린충남’도 연구원 역사의 일부로서 빠짐없는 기록물로 보관이 되어야 한다는 바램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변함없이 지속된 열린충남의 발간과 함께 끊임없이 충남미래의 희망찬 소식들이 전해져 그 가치가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

“열린충남”이 창간부터 어느덧 30살이 되었네!

충남연구원은 1995년 개원부터 지금까지 기본과제와 수탁과제, 현안과제, 연구조성 및 발간사업 등을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중 연구조성 및 발간사업의 하나로 계간지를 제작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된 것이 발간책자의 이름을 선정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의 연구기획 담당자들과 연구원 자문위원들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충남의 행복한 미래를 여는’이라는 의미가 담겨진 『열린충남』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직접 기획에 참여하면서 이 이름이 얼마쯤의 시일이 지나다 보면 다른 이름으로 바뀌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로 변하지 않았으니 그 이유는 아마도 평범한 이름이지만 누구나 다 충남의 미래를 활짝 열고자 하는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당시 대전광역시 은행동 舊충청은행 본점사옥의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에서 기획되어 창간



된 “열린충남”의 30살에 느끼는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열림충남”의 역할을 응원하며

충남연구원은 1995년에 민선1기 출범과 같이 충청남도의 싱크탱크로 출범하였다.
그 이후 도전과 변화를 통한 새로운 동력과 함께 지방 선도정책의 연구성과를 창출하였다.
더불어 충남도민과 함께 정책소통의 창구로서 충남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면서 어느덧 30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동안 열린충남은 민선1기에 시작하여 민선8기에 이르기까지 충청남도와 각 시군의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함께 하였다.
그 시기에 맞는 중요한 정책주제와 현안시책에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와 정책방향 및 전략, 지역 전문가의 제안과 현장소식, 도민의 의견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다루어 왔다.

최근에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하여 국가차원이나 광역지방자치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 또한 충남연구원이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정책의 시범적인 모델을 선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응원해 본다.

현재 우리는 디지털과 AI, 아날로그를 동시에 접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전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열린충남의 출간방식이나 독자들과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도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러한 균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제는 앞으로 또 다른 3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현재 열린충남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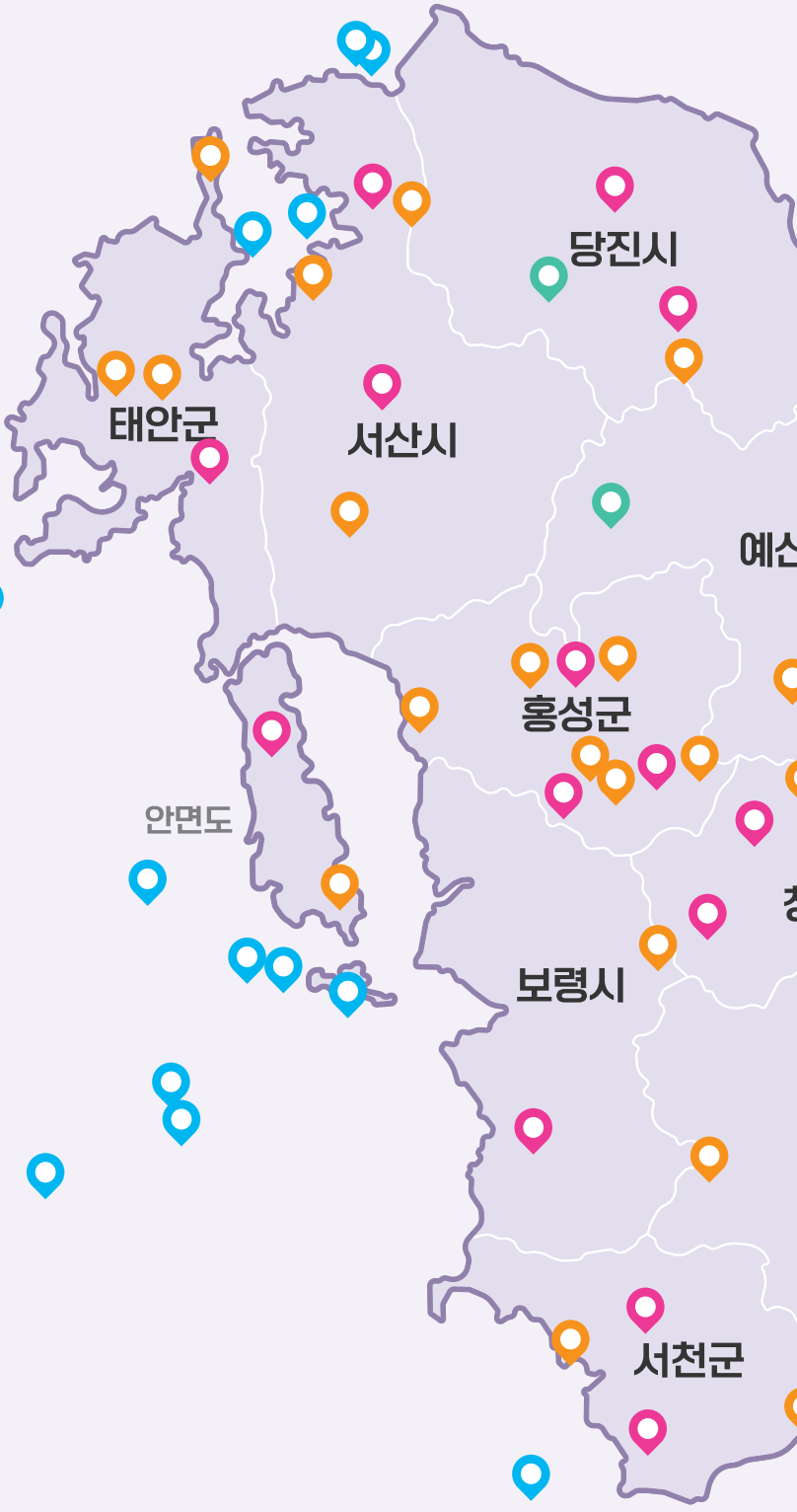
서른 해, 충남을 담다

충남의 도시(20개소)

금산군 다락원
태안
홍성
청양
계룡
논산시 강경읍
서천군 장항
서산시 대산읍
아산시 염치읍
부여군 부여읍
보령시 웅천읍
조치원
금산
홍성군 광천읍
서천
연무소도읍
서산
합덕
당진
안면읍



홍성군청



충남의 섬(15개소)

격렬비열도
장고도
원산도
호도
대난지도
고파도
웅도
가의도
소난지도
녹도
유부도
고대도
옹도
외연도
내파수도



대난지도

충남의 도시 충남의 마을 충남의 섬 충남의 시장



중리어촌체험마을

당진전통시장

충남의 마을(35개소)

금산 방우리마을
청양 꽃뫼마을
홍성 거북이마을
아산 외암민속마을
서천 동자북마을
당진 푸레기마을
부여 기와마을
청양 가파마을
태안 만대마을
보령 은행마을
예산 대흥마을
청양 칠갑산 산꽃마을
공주 풀꽃이랑마을
논산 포전마을
홍성 홍동마을
계룡 쌈채피망청정마을
서천숲 체험마을
서산 벽화마을
홍성 느리실마을
당진 백석올미마을
태안 대야도마을
부여 반교마을 돌담길
칠갑산 알프스마을
청양 상신마을
서산 중리어촌체험마을
금산 아토피자연치유마을
태안 갈두천마을
금산 바리실마을
논산 덕바위마을
태안 매화둠벙체험마을
홍성 이응노마을
서산 회포마을
서천 월하성마을
예산 황새마을
홍성 남산마을

충남의 시장(7개소)

부여시장
금산시장
강경대흥시장
예산덕산시장
온양온천전통시장
공주산성시장
당진전통시장

서른 해, 충남을 담다

충남의 도시 발전과 미래

박철희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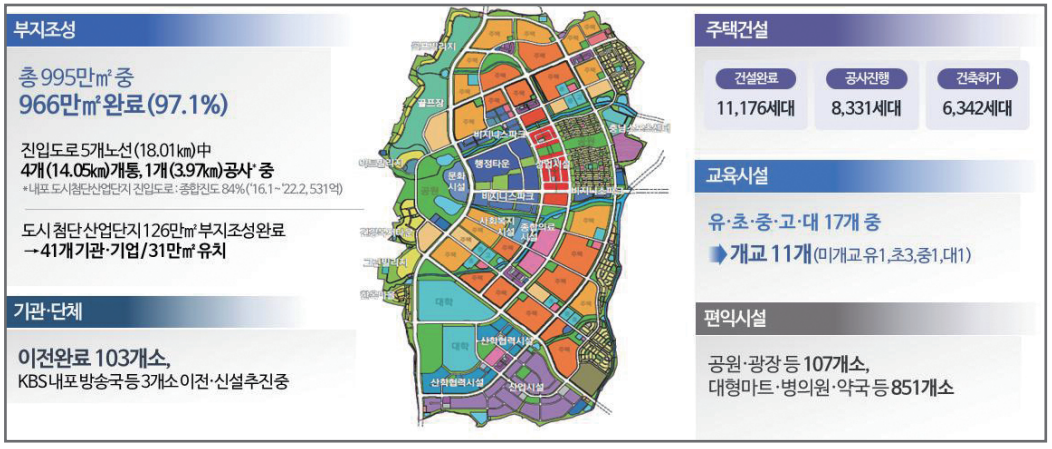
1. 충남의 도시 현황과 변화

충청남도에는 15개 시·군이 있으며, 행정구역상 47동, 25읍, 136면이 있다. 이중 동·읍 지역은 지역의 거점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며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충남의 많은 도시가 도농복합도시지만 상당수의 도민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생산과 여가활동을 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어, 도시의 발전과 환경변화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충남의 도시 발전과 변화에 중요한 계기를 보면, 도청소재지의 이전과 내포신도시와 혁신도시 조성(2006년 이전 확정, 2013년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변되는 세종시의 조성, 수도권과 연접한 아산, 천안지역의 도시화, 현대제철의 성

〈그림 1〉 내포신도시 조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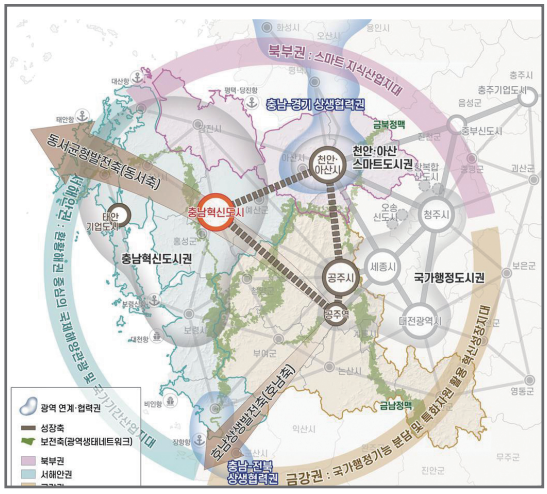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2021), 내포신도시 민간투자유치제안서

〈그림 2〉 기존 계획권역(4대 개발경영권)



〈그림 3〉 공간구조 구상



자료: 충청남도(2021),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장으로 인한 당진시 발전, 3군 본부을 중심으로 한 계룡시 출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이를 중심으로 한 서산, 보령시의 발전, 태안기업도시 등을 들 수 있다.

도청소재지 이전은 그동안 대전광역시와 공주를 중심으로 한 충남 내륙 중심의 지역발전에서 내포지역으로 이동시키며 내포신도시를 만들고 서해지역의 도시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문화적 측면에서 백제문화에서 내포문화로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시켰다.

연기, 공주 지역에 중앙행정기능의 이전으로 조성된 세종특별시는 국토의 도시체계를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충남의 도시와 공간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기존 충남의 4대 개발권역에서, 충남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천안·아산, 공주 등을 혁신성장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체계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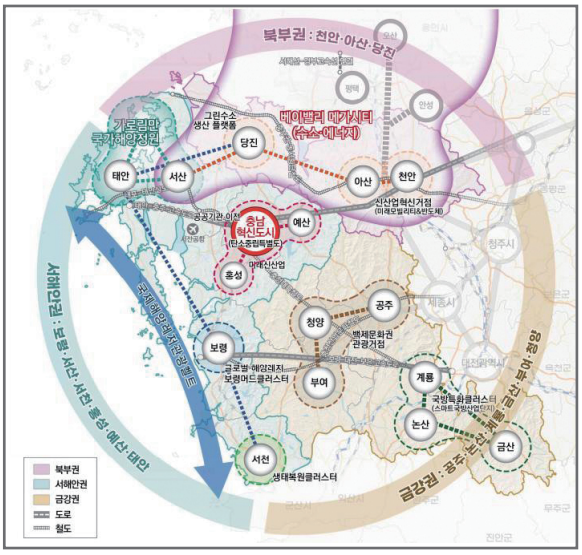
수도권 과밀에 따른 규제, KTX의 개통은 연접한 아산·천안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 유치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구 증가(95년 약 15만 명→25년 약 39만 명)는 아산시의 도시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1990년 논산 두마면에 육해공 삼군본부의 이전은 계룡시를 만들었다. 1980년에 육군과 공군본부가 이전하였고, 93년에 해군본부가 이전 완료되면서 논산은 군에서 시로 승격하게 되었고, 이후 계룡시(2003년 출범)가 별도로 만들어졌다.

IMF 위기를 촉발하였던 한보철강의 현대자동차그룹으로의 인수와 현대제철의 성장은 당진군을 시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진공장의 정상화는 고용인구 증가와 인구유입, 관련 기업유치로 이어졌으며 당진시의 도시화와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충남도청소재지의 이전은 서해안, 서북부 도시에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서산, 보령, 서천은 서해안권 발전축 선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산업도시 관광도시로 변화하게 된다.

〈그림 4〉 충남 도시 발전구상



자료 : 지방시대위원회(2023),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2. 충남 도시의 발전과 특화

충남의 도시는 여러 대외적인 정책환경의 변화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회요인을 살려 도시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있어 그동안 우상향적인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민선 8기에서는 충남이 주도하는 발전 방안으로서 지역별로 특색을 살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 시군별 중장기계획 등을 통해 도시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5〉 민선8기 충청남도 도시 특화 발전 방향



〈그림 6〉 백제문화복합단지 조성 – 공주



천안·아산은 충남에서 중추도시생활권을 형성하며 4차산업혁명시대 지방거점 도시로서 스마트 광역도시,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수도를 지향하고 있다. 천안은 천안역사와 역세권 개발과 함께 종축장 부지 등을 활용한 최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하고, Bay Valley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산은 북부권의 중추도시로서 50만 첨단 자족도시를 이루며, 충남권역 재활병원(25년 10월 예정)으로 의료서비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홍성·예산은 혁신도시생활권을 형성하며 내포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환황해권의 중심 도시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내포혁신도시는 용봉산·수암산을 배경으로 홍예공원, 문화시설 지구[1], 충청남도 행정타운, 산업과 정주환경이 구축된 5무 도시를 완성할 것이다. 홍성의 경우 구도심의 홍주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도시 복원, 예산의 경우 군청사의 이전으로 새로운 도시 면모를 갖추고 예당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서산·당진·태안은 서해북부생활권으로 서해 해양과 생태 및 수산자원을 활용한 해양 산업 관광도시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서산은 서해 관문도시로서 자동차, 화학 등 미래산업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원도심의 재생과 연계한 공동육아, 자원봉사, 문화 향유, 여가 기능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확충한다.

공주·부여·청양은 내륙생활권을 형성하며 백제문화를 기반으로 문화관광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주와 부여는 백제왕도로서 고도보존사업과 연계하여 민선 8기에서 문화명품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한옥타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1) 문화시설 지구 내에는 충남도서관이 건축되어 있으며, 향후 충남미술관, 충남 예술의전당 등 충남의 대표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

옛 도시, 고도의 이미지를 회복할 것이다.

보령·서천은 서해남부생활권으로 서해안권의 신해양도시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보령은 해양과 머드를 소재로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서해 해양 레저관광벨트의 핵심도시로 발전을 목표하고 있다. 보령은 보령해저터널 개통과 함께 원산도를 테마랜드로 조성하고 섬 자원,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논산·계룡·금산은 남부생활권으로 대전광역권과 연접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국방·웰빙·바이오를 테마로 軍문화 도시, 국방산업도시, 인삼바이오도시로 미래도시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3. 충남 도시의 도전과 미래

충남의 도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출산과 다문화 등의 인문사회 변화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도민의 삶의 방식과 도시 공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구 증가, 경제 성장, 기술 혁신 등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잘 활용되지 않으면 사회문제, 자원 소모,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충남의 도시뿐 아니라 국토의 모든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 도시별로 주민들이 살기에 매력 있는 도시, 경쟁력있고 차별화된 개성있는 도시, 생활하기에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는 향후 충남과 도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표 1〉 좋은 도시의 조건

구 분	잘사는 도시(풍요) ·풍(豊)	더불어 사는 도시(융화) ·화(和)	품격 있는 도시(품격) ·격(格)
매슬로우 욕구설	생물학적(1단계) 안전욕구(2단계) 충족	사회적(3단계) 자긍심욕구(4단계) 충족	자기실현욕구(5단계) 충족
도시 충족 조건	• 의식주 해결 • 일자리 창출 • 기업하기 좋은 도시 • 낮은 소비자 물가 • 치안, 안전보장	• 사회 격차 해소(빈부, 소득, 정보, 교육, 의료격차 등) • 사회 소외계층 복지 해결 • 글로벌 도시 구현 • 기부, 봉사활동 일상화	• 삶의 질이 높은 도시 • 법질서, 배려정신 • 문화·예술욕구 충족 •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 자기계발, 성취 실현

자료: 최은수(2009), 명품 도시의 탄생, 매경출판

서른 해,
충남을 담다

농촌다움에 대한 불편한 고민들

정봉희 충남연구원 출판홍보팀장(feat. 조영재 박사)

"충남 시골마을의 현재 모습,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를 담아볼까?"

2010년 가을, 금산 방우리마을부터 시작된 '열린충남' 마을시리즈의 탄생 배경이다. 처음엔 2~3년 정도 둘러보면 되겠다 싶었던 원고가 웬걸, 2018년 겨울까지 꼬박 15개 시·군 총 35곳이나 되는 마을을 직접 돌아다녔던 게 아닌가. 하면 할수록 애정이 생겼다고나 할까.

금산 방우리마을·아토피자연치유마을·바리실마을, 청양 꽃뫼마을·산꽃마을·가파마을·알프스마을, 홍성 거북이마을·홍동마을·느리실마을·이응노마을·남산마을, 아산 외암민속마을, 서천 동자북마을·월하성마을, 당진 푸레기마을·백석울미마을, 부여 기와마을·반교마을, 태안 만대마을·대야도마을·갈두천마을·매화둠벙체험마을, 보령 청라은행마을, 예산 대흥마을·황새마을, 공주 풀꽃이랑마을·계룡산 상신마을, 논산 포전마을, 계룡 쌈채피망청정마을, 서산 서친숲마을·중리어촌체험마을·회포마을, 천안 미나릿길 벽화마을, 논산 덕바위마을 등이다.

돌이켜보니 생소한 이름의 마을부터 여러 에피소드가 많았던 마을까지 각양각색의 숨은 자랑거리를 찾아내는 재미가 남다른 답사기였다고 자평해본다. 보물찾기가 쏠쏠했다.

개원 30주년을 계기로 지난 마을시리즈를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이번 글을 쓰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필자는 방우리마을에 다시 가보자고 결정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충남 마을의 현주소도 알아보면서 나름 감회도 새롭겠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5월 어느 날, 2010년의 기분으로 금산 방우리마을을 찾았다. 행정구역은 금산이지만 여전히 생활권은 무주였다.

그때와 변한 건 금산읍내에서 방우리마을로 들어가는 다리가 놓여져서 그나마 가까워진 것은 맞지만 온전한 연결이라 볼 순 없었다.

마을은 조용했다. 고추는 심어져 있고, 과수원은 잘 정돈되어 있어 매일 사람의 손길이 닿았겠구나 싶었다.
한적한 마을에 새로 지은 단독주택들이 들어섰고, 전원주택이 들어설 부지도 만들어져 있는 걸로 봐서 뭔가 돈의 냄새(?)가 났다고 해야 할까?

1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지역의 마을만들기 정책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때의 마을들이 지금은 더 살기 좋아졌는지 궁금해졌다.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0년 전과 후로 나뉜다. 중앙정부가 마을 사업과 정책을 모두 각 광역지자체에 이양하면서 과도기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 코로나 감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린 시기이기도 하다. 마을사업에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다는 의미다.

이에 연구원의 마을 전문가인 조영재 박사와의 인터뷰로 2020년 이후 우리 마을 정책의 과제와 해결 방안을 풀어가 보기로 했다.

조 박사는 “앞서 언급했듯이, 2020년 전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마을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었던 게 사실이었고, 지방 이양과 코로나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들 서두의 정석처럼 #지방소멸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생 시대라는 급격한 환경변화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낙후된 마을의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말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행안부가 발표했던 인구감소지역 중 충남은 공주, 보령, 논산, 예산, 태안, 청양, 부여, 서천, 금산 등 9개 시·군이 포함됐다.



또한,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 위험정도를 분석한 결과 충남은 금산, 부여, 태안, 서천, 청양 등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홍성, 예산, 보령, 논산, 공주, 서산, 당진 등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천안, 아산, 계룡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지역 소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조 박사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각 지자체가 수립한 정책을 평가해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기금 운영의 취지는 너무 좋지만, 여전히 시설 설치 등 하드웨어(H/W)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지자체 차원의 계속적인 사업 추진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혹시나 단발적인 사업 추진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균형발전 공모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이것이 바로 공모사업의 딜레마가 아닌가 싶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되는 각종 공모사업들이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 기금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작 누가 봐도 낙후된 지역일지라도 그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제대로 된 정책적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 박사는 "물론 내 지역을 더 살리고 싶다는 열정과 우수한 정책 개발 노력이 결코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다.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지역 간·지역 내 불균형 심화와 상대적 박탈감, 지역민 간 갈등문제 등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조언했다.

요즘 유행하는 지역 발전 정책의 한 축이 바로 컴팩트 & 네트워크형 도시 만들기라고 한다. 물론 농촌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효율성과 생활환경의 불편함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보인다.



필자는 생각해봤다. 우리가 어릴 적 생활했던 시골마을들도 적용 가능할까? 거의 평생을 한 곳에서 지낸 주민들, 아니 지금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던 집을 쉽게 떠날 수 있을까? 결정도 어렵고 적응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지역 마을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관건이라 생각한다. 정말 낙후지역과 한계(限界)마을에 적용 가능한 사업 발굴과 예산 투입, 기본소득세에서 한 발 더 나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원금(수당)을 지급해줘야 하지 않을까?

귀농귀촌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전반적 인구감소 현상을 막을 순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마을이 사라지는 건 더 어렵다고 봐야 한다. 마을의 정체성은 그 마을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원칙하에 소규모라도 맞춤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말이다. 유럽의 산촌(散村)형 공간을 떠올려보게 된다. 두세채씩 집이 멀리 떨어져있는 그림같은 사진처럼 말이다.

글을 마무리하려는데,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의문이 더 들게 된다. '그래...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진정 농촌마을의 소멸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가?'
'농촌마을... 소멸을 막아야 할 정책인가? 소멸을 염두에 둔 정책이어야 하나?'
'귀농귀촌이 아무리 좋아도 농민없는 농업(농주분리)이 농촌의 모습인가?'
'읍면동 소재지의 기능도 악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과연 농촌마을의 난개발이 문제인가? 무개발이 문제인가?'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니 휴경지가 늘어난다는데, 미래 식량안보 문제는?'



서른 해,
충남을 담다

충남의 보배,섬을 섬겨야 한다

이재언 광운대학교 해양섬정보연구소 연구원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로써 섬이 국토의 중요한 일부임을 의미한다.
행안부 산하 한국섬진흥원에 의하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인섬은 473개, 무인섬은 2,918개에 이른다.
섬은 우리 국민 81만 4,230명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생활근거지이자 국가의 영토와 영해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섬은 외면받아 왔다.

아직도 정부나 국민들은 섬에 대하여 잘 모르고, 관심이 없으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모든 정책에서 섬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진 상태다.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사이 섬은 교통, 의료,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이촌향도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은 더욱 중요해져만 가고 있다.

그동안 충남연구원은 서해안에 떠 있는 충남의 섬들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여러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섬 연구는 바다에 떠 있는 섬,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의 고유한 성향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정책을 붙여넣기 할 수 없고, 시간과 경제적인 이유로 연구활동이 마냥 쉽지 않다.
또한, 다양한 중앙 부처들과 협력하며 섬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섬 발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출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영역의 하나다.

필자의 저서 ‘한국의 섬’ 시리즈 13권 중에 충남의 섬은 총 37개가 나와 있다. 그동안 시리즈로 열린충남에 게재했던 15번의 원고에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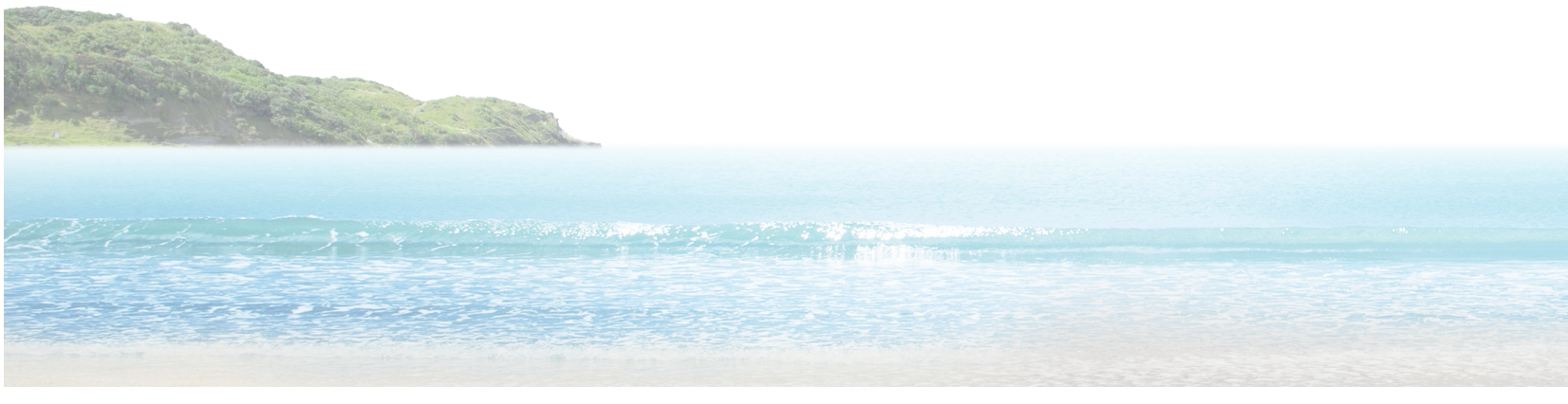
· 당진시 –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조도, 도비도, 행담도
· 보령시 – 고대도, 녹도, 빙도, 삽시도, 소도, 외연도, 원산도, 월도, 육도, 장고도, 죽도, 추도, 허육도, 호도, 효자도
· 서산시 – 간월도, 고파도, 분점도, 우도, 웅도
· 서천군 – 유부도
· 태안군 – 가의도, 격렬비열도, 내파수도, 대야도, 마도, 신진도, 안면도, 웅도, 오도, 황도
· 홍성군 – 죽도

충남의 섬들은 대부분 접근성이 좋아서 이런 섬들을 연구하고 여행지나 해수욕장, 해산물 채취, 낚시터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다.
예를 들면 전남의 흑산도나 홍도, 여수의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백령도, 연평도 등은 경치가 뛰어나고 여행지로 유명하다.
그러나 접근성이 떨어져서 겨울에는 사나운 풍랑으로 인해 여객선이 다니지 못한다.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야 할 때도, 결혼식 날을 받아 놓고도, 부모님의 상을 당해도... 꼼짝없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 곳이 바로 섬이다.

그나마 충남 대부분의 섬들은 다행히 내해에 속해 있으며, 대표적인 섬은 장고도, 고대도, 원산도, 삽시도 등이다. 이 섬들의 특징은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끼고 있다는 것.

물론 외해에 속한 외연도, 녹도, 호도 등도 있다.
내해 소속된 섬들의 교통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외해에 속한 이 3개 섬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함께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객선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주민의 삶은 물론 충남 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충남에서 가장 먼 외연도, 녹도, 호도는 보령에서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의 왕복이 있는데 이 항로는 손님이 적다는 이유로, 수시로 날씨가 좋아도 오후 배는 결항



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기상 악화라지만, 사실은 적자 노선이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에 외연도와 그 부속된 섬 황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선을 빌려 황용호 씨가 혼자 사는 황도를 방문하였는데 오후에 나오는 여객선은 기상 악화라는 명분으로 결항하였지만, 마침 외연도에 기름을 내린 농협 배를 타고 보령항으로 나올 수 있었다.
힘이 없는 노약자들이 대부분인 이런 섬들은 누구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 여객선 종사자들 눈밖에 나기 싫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먼 섬들은 발전은커녕 교통, 주거, 복지 등 모든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필자와 3명의 일행이 외연도 당산제에 참석했었다.
김동일 보령시장도 참석한 가운데 점점 사라져 가는 전통 의식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대부분 젊은이가 사라진 섬에는 이런 전통문화 계승이 사라진 지 오래다.
북과 징, 꽹과리를 울리며 한바탕 신명 나게 노는 장면을 보면서 필자도 흥이 났지만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 오후에 들어오는 여객선은 기상 악화로 운항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한 개인의 체험에 불과하지만 급한 일을 당한 섬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해 보았다.
지금 세계는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자유롭게 수많은 나라들을 일일생활권으로 드나드는데 섬은 아직도 60~70년대 교통 체계가 계속되고 있으니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충남의 섬은 정말 무궁무진한 잠재자원과 활용가치가 높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모두가 섬겨야 할 보물섬이다.
각 섬이 갖고 있는 매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 많은 이들이 그 섬 주민들과 공존하며 편하게 드나들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서른 살이 서른 살에게

30주년 선배 서울연구원이 보내는 축하 인사
'충남 지역연구의 메카'로 자리잡길 응원합니다.

양재섭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도시정책연구소 도연재 대표

먼저 충남연구원의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3년 서울연구원 창립 멤버였던 저는, 2022년 개원 30주년을 맞아 '서울연구원 30년사'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연구원의 30살을 먼저 경험한 선배 연구자로서, 충남연구원 여러분들께 축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1995년 개원한 충남연구원은 지난 30년간 충남의 행정, 산업·경제, 지역·도시, 문화관광, 교통, 기후·환경 분야는 물론이고, 과학기술 진흥과 대학교육 지원에 이르까지 충남을 대표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연구원이 운영하는 '정책연구 플랫폼'은 충남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을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다른 연구원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충남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역조사와 정책연구에 매진한 선후배 연구원들 모두의 값진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세대를 일컫는 30년을 인생사에 비유할 때 '삼십이립(三十以立), 사십불혹(四十不惑)'이라고 합니다. 서른이면 자기 인생의 목표와 발전방향을 세우고, 마흔에는 미혹됨이 없이 일관되게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충남연구원도 30년간 축적해 온 조사자료와 연구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실험을 토대로 다가올 40주년을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저성장·저출생·고령화·인구감소,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환경과 산업구조 변화, 심화되는 지역간 불균형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상황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문제 인식과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시도가 요청됩니다.
모쪼록 즐겁고 슬기로운 연구원 생활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고 충남지역과 충남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미있는 연구성과를 차곡차곡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충남 지역연구의 메카'로 굳건히 자리잡기를 응원합니다.

언론이 바라본 충남

충남연구원 30주년, 도전과 성과 그리고 미래

언론인이 바라본 충남

충남연구원 30주년, 도전과 성과 그리고 미래

김방현
중앙일보 대전총국장

충남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1995년 설립 이래,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정책 싱크탱크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 경제 활성화 등을 이끌어 온 핵심 기관이다.
이에 개원 30년을 맞아 성과와 발자취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과제와 비전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30년 발자취와 주요 성과

충남연구원 설립 목적은 충남도와 시·군의 중장기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체계적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인력 180명이 일하고 있는 충남연구원은 지난 30년간 산업·도시·문화관광·교통·환경·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충남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해왔다.

□ 정책 기반 강화: 지난 30년간 연구과제 4918건 수행, 간행물 2056권 발행, 세미나 1565차례 개최함. 2024년 한 해에만 전략과제 43건과 연구과제 210건 수행, 도정과 시·군 정책에 기여
□ 지역 발전 견인: 6개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건양대학교 글로컬 대학 선정 지원,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반영 등 국가정책과 연계된 대형 프로젝트 수행
□ 미래산업 육성: 자동차 AI 반도체 인프라,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 등 국가 R&D 과제 유치와 정부예산 확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섬
□ 혁신과 소통: 인포그래픽, 정책지도, 유튜브 요약서비스,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한 정책성과 확산, 조직문화 개선과 가족친화 인증 등 내부 혁신 병행
□ 사회적 가치 실현: ESG(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 경영 선포, 인권경영센터 운영 등은 물론 라이즈센터 신설, 과학기술진흥원 통합 등 융복합 연구 조직 확장

이런 성과는 충남연구원이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정책 실행력과 현장성을 갖춘 '실천형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2025년, 미래를 여는 전략과제와 도전

충남연구원은 2025년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고, 4대 연구 아젠다와 35개 미래 전략 과제를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장하는 글로벌 혁신거점·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현 △농업·농촌의 매력도 제고와 스마트화 △지역 특성화 발전과 자치분권 확대 등 아젠다를 설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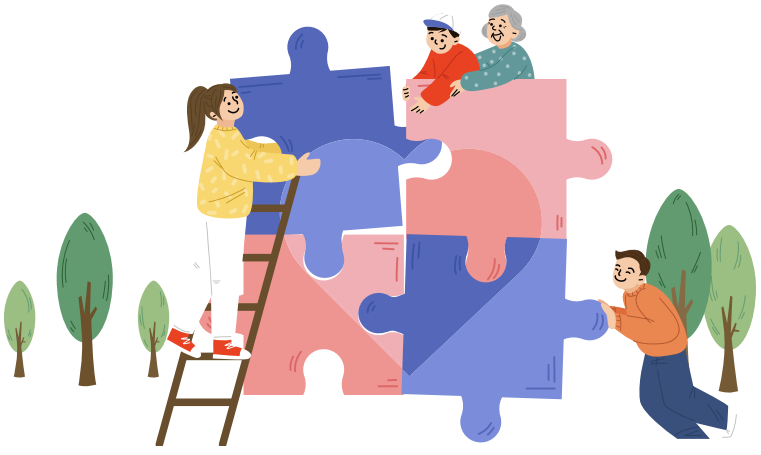
주요 전략과제를 들여다보면, 충남형 광역 비자 운영, 분산에너지 활성화, 농업 데이터 체계 구축, 지방소멸 대응, 노인 교통비 지원, 양자산업 추진 등 시급한 현안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주민자치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 진단, 내포신도시 공공예술 관리, 재난 위험 감소 등 지역 성장동력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탄소 상쇄 프로그램, 시군별 오존농도 분석 등 기초 연구 강화는 물론, 도와 시군, 도의회,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업, 정책활용도 평가 체계화,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등 연구 시스템 혁신도 병행하고 있다.

미래 청사진–충남연구원의 비전과 과제

충남연구원은 '글로컬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이는 충남의 현장성과 국제적 흐름을 동시에 반영하는 선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글로벌 혁신거점: 국제적 연구협력 확대, 첨단산업·과학기술 정책 선도, 미래 30년을 내다보는 '미래연구팀' 신설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기후위기 대응, 인구구조 변화, 지역 불균형 해소 등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한 선제적 정책 제안과 실행
□ 스마트 농업·농촌: 데이터 기반 정밀 농업, 스마트팜, 농촌융복합산업 등 미래 농업 혁신에 집중, 청년·여성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
□ 자치분권과 특성화: 도와 시·군, 도민과의 소통 강화,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역량 제고

충남연구원은 지난 30년간 지역발전의 길잡이로서,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기술 패러다임 변화, 사회구조 전환 등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며, '힘쎈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연구원의 혁신적 연구와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 그리고 도민과의 소통이 어우러질 때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민 행복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면 충남연구원의 다음 30년 전망은 더욱 밝을 것으로 전망한다.





고기의 가치를 생각하는 수의사, “샤르베티에”



고기의 가치를 생각하는 수의사, "샤르베티에"

Q1__ 샤르베티에(Charvetier)는 무슨 뜻인가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세요.

샤르베티에(Charvetier)는 프랑스어로 '고기를 다루는 수의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수의사의 관점에서, 건강하고 정직한 육가공품을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샤르베티에는 단순히 햄이나 소시지를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고기 소비의 문화와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정통 샤퀴테리 브랜드입니다. 재료부터 제조, 그리고 소비 방식까지 고기와 사람의 건강을 함께 생각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Q2__대표님이 샤르베티에를 시작하시기 전 원래는 수의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고기를 다루는 수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수의사로 일하면서 생명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섬세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체감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축산농가의 문제로 인해 폐기될 위기에 처한 건강한 고기를 보면서, '누군가는 이 고기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속가능한 고기 소비'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이 곧 샤르베티에 창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창업이 아니라, 고기의 생애주기를 존중하는 철학적 실천이었습니다.

Q3__샤퀴테리라는 용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샤퀴테리를 포함하여 개발하고 판매하시는 제품들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가장 자신 있는 대표 제품은 무엇인가요?

샤퀴테리(charcuterie)는 유럽 전통의 육가공 기술로, 고기 본연의 맛과 풍미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잠봉뵈르, 소시지, 훌라이쉬케제 등 다양한 샤퀴테리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모두 아질산나트륨, 전분, 인산염 등 불필요한 첨가물 없이 건강한 원료로만 만듭니다.
가장 자신 있는 제품은 잠봉과 훌라이쉬케제인데 잠봉은 짜지 않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어 만들었습니다.
훌라이쉬케제는 유럽에 고기로 만든 치즈라는 뜻의 부드러운 햄인데 저희 시그니처 제품입니다.
플레인 버전도 있지만 바질, 파프리카, 흑임자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제품입니다.

Q4__샤퀴테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직접 교육도 받으신 것으로 압니다. 생산하는 방법을 직접 배우신 이유와 교육과정은 어떠하였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정통 샤퀴테리는 단순히 고기를 가공하는 기술이 아니라, 숙성과 염도, 발효, 온도 등 생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조리법입니다.
제대로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유럽 육가공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고 창업 초기에 육가공 마이스터 고문님과 함께 제품을 개발하였고 또한 국내에서 HACCP 기준에 맞춰 위생과 제조법을 체계화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들였고, 지금도 새로운 기술을 계속 연구 중입니다.



유승현 샤르베티에 대표



Q5__**"한국형" 샤퀴테리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차별을 두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 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은 어떠했는지 말씀해주세요.**

우리 한국인의 입맛을 고려해 기존의 유럽식 샤퀴테리에서 익숙하게 접근 가능한 레시피를 더해서 한국형 샤퀴테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은 발색과 보존을 위한 일반적인 첨가물이지만, 저희는 그 대신 석류, 로즈마리, 키위 등 과일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Q6__**샤르베티에는 온라인 생산뿐만 아니라 천안에 브런치카페도 운영 중인데요. 이처럼 온라인 판매 외에도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선물 세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천안 본점 '샤르베티에 브런치'에서 직접 만든 샤퀴테리를 활용한 브런치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B2B 유통, 식음료 브랜드와의 콜라보, 백화점 및 마켓 행사 등 다양한 채널로 고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판매하는 브랜드로서 확장 중입니다.

Q7__**충남 로컬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충남"으로 특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충남의 특산물 중 어떤 것들을 사용하시는지, 또 이를 활용하게 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샤르베티에의 시작이자 생산거점이 충남 천안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로컬의 가치를 담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싶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산의 부추, 서산의 표고버섯 등의 다양한 청년 농가와 함께 제품을 개발하고 콜라보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이 돼지농가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좋은 농가가 많아서 주재료인 돼지고기 역시 지금은 천안 돼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ChárVetíer

Q8__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충남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은근히 다 있는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없는 게 없어요.
그런 느낌이 지역성을 더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지역 자체도 중간 포지션이다 보니 중심의 역할을 많이 하고, 균형도 잘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어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다고 하면, 충남은 지역 자체가 둥근 점이 오히려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봅니다.

Q9__많은 가능성을 가진 충남 로컬브랜드의 대표로서 충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의 협업은 지원하에 진행된 것보다 직접 친해진 농가나 다른 업체 대표와의 1차원적 콜라보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역시도 성과가 있었지만 충남의 로컬브랜드로 지금 다음 스탭을 밟으려는 단계에서 저희와 같은 업체들을 선보이고 협업할 수 있는 자리,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 지역 축제의 특별 세션과 같은 기회가 필요합니다. 좋은 로컬브랜드로 자리잡기 위해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으니 함께 할 수 있고, 소개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특색있는 충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10__마지막으로 앞으로 꿈꾸는 샤르베티에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샤르베티에는 단순한 육가공 브랜드가 아닌, 건강하고 식육 문화를 이끄는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샤퀴테리 전문 연구소 설립, 수출 브랜드 확장, 미슐랭 스타 셰프들과의 협업, 반려동물 샤퀴테리 라인 개발 등 다양한 꿈을 꿉니다.
고기를 고기로 끝내지 않고, 한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는 브랜드, 그것이 샤르베티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서른 살이 서른 살에게

95년생 동갑의 편지

계란 한 판을 다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계란은 참 쓰임새가 많습니다.
계란국, 계란말이, 계란찜…
저는 마치 그런 계란처럼,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서른 살로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익어가고 있다니…
저는 구운계란 일까요? 하하…

1995년에 태어난 우리 둘.
당신은 조직으로,
저는 사람으로 30년을 채워왔습니다.
쓰임은 달랐을지 몰라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버티며 그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듯하면서도 아직은 새로운 서른,
앞으로도 다채롭게 쓰이고,
더 고소하게 익어가길 바랍니다.
서른 해를 지나온 우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지영 기획경영실

벌써 제가 서른이라고요..?
새삼스레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흘러갔나 싶다가도
아직도 부족함이 참 많은 서른 인 것 같습니다.
제게 서른은 여전히 배우고 부딪히며
나아가야 하는 나이이지만,
충남연구원이 쌓아온 서른 해는 지역에서
단단히 자리를 잡아온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금,
연구원이 앞으로 맡게 될 기능과
책임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중요해질 것입니다.

충남연구원이 오래도록 충남을
대표하는 종합 연구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왔듯이,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작지만 진심 어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이 맞이한
서른 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주희 라이즈센터

반가워, 서른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20대의 마지막을 지나 이제 멋진 30대를 시작하는구나. 마침 나도 올해 딱 서른이고, 신기하게도 생일도 비슷해. 올해 서른 살을 맞이하는 순간,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 조금은 두렵고 불안했던 것 같아. 하지만 서른 개의 사계절을 겪어보니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 뒤에는 설렘과 기대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 보니 서른 살이라는 성숙함이 된 것 같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현재를 영어로 Present(선물)라고도 하자나. 오늘의 선물인 ‘지금’을 연구하며, 충남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성숙한 충남연구원이 되길 바라. 30주년 진심으로 축하해.

고성훈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원 소식

충남 청년정책 공동연구 활성화 맞손

충남연구원, 인구감소시대 도시계획 과제와 대응 방안 모색

충남도,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한 VOCs 관리 방안 모색

충남 청년정책 공동연구 활성화 맞손

23일 천안에서 충남연구원·청년재단 업무협약 체결

충남연구원은 5월 23일 천안청년센터 안서이음에서 (재)청년재단과 지역 청년정책 공동연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지역 청년정책 발전, △청년연구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청년지원서비스 고도화, △기관 간 인프라 활용 등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과 사업 지원 방향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은 "현재 충남도는 △(일자리)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주거)충남형 리브투게더 △(홍보)눈높이 홍보를 통한 정책수혜자 확산 등 실효성 높은 청년정책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며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청년이 처한 어려움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청년정책포럼(가칭)' 공동 개최 등 청년재단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충남지역 청년정책 추진에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청년재단은 지난 10년간 청년지원사업과 정책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응원해 왔다"며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충남의 청년정책이 발전하고 청년인재가 꿈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청년정책특위에서 활동 중인 안종혁 기획경제위원장은 "올해 충남 청년정책 예산은 4,557억 원으로 작년 대비 959억 원이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예산의 비중은 적다"며 "앞으로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재적소에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도훈 위원, 충남연구원 백운성 연구기획단장, 박춘섭 책임연구원, 이상준 기획조정팀장, 그리고 중앙청년지원센터 임대환 센터장, 천안시 한미순 청년정책과장, 천안청년센터 최진근 센터장 등도 참석해 상호 교류·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충남연구원, 인구감소시대 도시계획 과제와 대응 방안 모색

공간구조 재편, 도시 간 네트워크 확대 등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 공감대 형성

충남연구원은 5월 13일 연구원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전세종충청지회, LH토지주택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감소시대, 도시계획의 과제와 미래 대응”을 주제로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경제성장의 둔화·양극화,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속에 스마트시티·디지털 트윈·AI적용 도시계획 등 새로운 도시개념의 등장에 발맞춘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목원대 교수)은 기조발제에서 “도시는 인구뿐 아니라 기능, 관계망, 환경적 지속성에 기반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지난 2003년에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재정비해 인구감소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 국토계획의 법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은 “도시와 농산어촌 등 다양한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는 충남 지역의 차별화된 도시 성장은 정부, 충남도 및 시·군, 그리고 연구기관·기업 등의 교류·협력으로 일궈낸 도시계획 수립·추진의 성과”라며 “이번 세미나는 인구감소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는 매우 시의성있는 자리인 만큼,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과 실천 과정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었는지 살펴봐야 지금의 우리가 아닌 미래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시대는 경제적 위기, 노동력 부족, 사회적 불안정 등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지만, 오히려 환경, 도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사회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충청남도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도시 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생활서비스 강화 △지역 내(대학 포함) 유휴공간을 연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람 중심의 농촌 재구조화 △모빌리티 혁명에 대응한 교통·의료 정책 전환 △인구감소대응 지역활력펀드 조성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상훈 대전세종충청지회장의 좌장으로 어번플러스 김영각 대표, 한국교통대 김용진 교수, 국토연구원 박경현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안윤상 서기관, LH토지주택연구원 이삼수 연구위원, 충북연구원 변혜선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인구감소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국토도시계획의 과제와 해결 방안 등을 토론했다.



충남도,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한 VOCs 관리 방안 모색

대산석유화학단지 중심의 배출관리 집중 논의

충남연구원(원장 전희경)은 4월 22일 천안아산KTX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VOCs 관리정책 발굴을 위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도 내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기여도가 가장 높은 대산석유화학단지 중심의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남연구원 김종범 책임연구원은 "지난 2020년에 수립된 충청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수행하고 있는 이행평가에서 PM2.5, NOx 등 대부분의 물질은 삭감목표를 105~202% 달성하고 있으나, VOCs는 목표 달성율이 상대적으로 부진해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VOCs는 정확한 배출원 확인 등 측정분석이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할 경우 정밀 진단과 원인 규명이 가능해 도내 VOCs 배출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립환경과학원 김정훈 연구사, 열린공간 김정호 소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정준식 연구사 등도 첨단장비를 장착한 이동차량과 항공기를 이용한 관측 사례 및 관리 정책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5~2029)'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5년간 충남도의 대기질 관리를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충청남도와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고려대, 강원대,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등 분야별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 동향 및 첨단측정장비 활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연구원 발간물

인포그래픽



충남연구원 구성원 MBTI는?
어디에, 어떻게 활용해볼까?
강마야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장 외 4인



충청남도 외국인 체류 현황과 정책 방향
윤향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정책지도



충남 쇼핑약자 기초 추정&정책방향
이민정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차정우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원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농촌마을(행정리) 소멸 실태 및 정책과제
윤정미 선임연구위원

충남 리포트 플러스



서산 석유화학 첨단소재 특화
국가산업단지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김양중 |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충청남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추진방안
이민정·전춘복 |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원

QR코드를 스캔하면 YouTube채널로 연결됩니다.

충남연구원 정책연구 플랫폼

QR코드를 스캔하면 CNI 정책연구 플랫폼 채널로 연결됩니다.

열린충남

THE 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은 도민의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연구원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흥동)
TEL 041-840-1114 FAX 041-840-1129 http://www.cni.re.kr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실천"
본 인쇄물은 재활용 가능한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